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규제·상생안 만든다
산업·경제 낙후된 상점가 부동산 매입·수리로 지역재생 성장주기별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 도시웰빙 높이는 사회혁신 아이디어 현장검증 장기실업자에 '5년 보장'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행재정·교육 공립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찬반논란 지속

환경·안전 교사 서명운동으로 공립학교 노후건물 재건사업 노후건축물 관리에 市정부 적극 개입 근거 마련 '문화유산 가치'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도시교통 AI 카메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집중단속
도시계획·주택 주민 자발적 참여로 집 앞 동네길 푸르게 가꾸기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규제·상생안 만든다

시민불편·이해관계자피해 최소화...시민편익은 최대화

미국 시카고시 / 도시교통

미국 시카고시는 차량·자전거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의 확산에 대응해, 우선 도입한 다음 시민의 편의와 불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상생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인기리에 도입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이처럼 시민편익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

도입 배경

- 다양한 공유서비스 개발에 따라 도시 변화 가속화
 -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공간 공유서비스부터 택시 공유서비스까지 실리콘 밸리가 주도하는 공유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 공유서비스 활성화에 시정부는 '선 도입 - 후 규제·상생 대안 마련'으로 대응 중
 - 에어비앤비는 도입 이후 안전·세금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지침을 마련하고,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는 신고제도로 민원을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규제·상생 방안 마련
 - 차량 공유서비스도 도입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컸지만, 추후 규제·대안 마련으로 많은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성공
 - 해당 서비스 도입 이후,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승차공유서비스의 탑승지역 제한, 스티커 부착 의무화, 택시기사 전용 공유서비스 개발 등의 대안 마련
- 택시·차량·자전거에 이은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추가 도입으로 이동 수단 다양화
 -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위와 같은 일반화, 규제 마련, 상생 방안,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 가까운 거리나 버스·전철·택시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시민의 교통편의도 높이고 시카고의 극심한 교통체증도 낮추는 효과 기대
 - 전기구동·태양열충전 방식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연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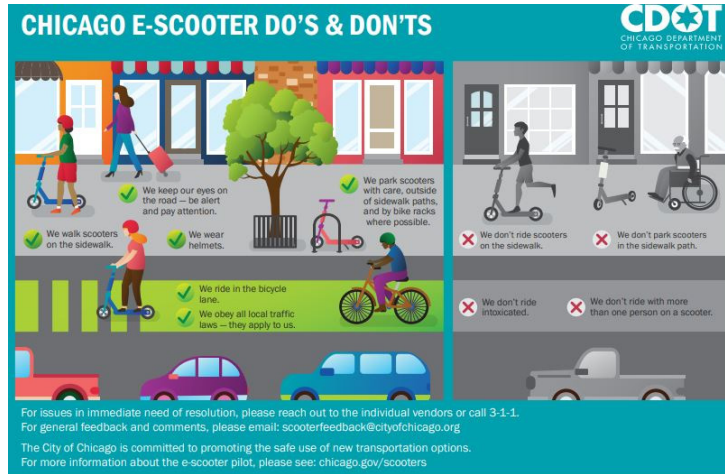
- 올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시작, 시민의 호응 큰 편
 - 2019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7월 17일(현지 시각) 기준 약 17만 회 이상 대여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음

- 현재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Loop), 로건 스퀘어, 오스틴, 애본데일, 필슨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 스마트폰 앱으로 도심 구석구석에 주차된 전동스쿠터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지정된 대여소나 번거로운 예약 절차가 없어 교외지역 시민도 편리하게 이용
- 자전거 공유서비스도 이미 인기리에 운영 중이지만, 시설 설치, 자전거 수리, 교외 지역 설치 어려움 등으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에 긍정적 반응
- 운영 사업체 10곳을 골라 시범운영 뒤 구체적 규제·상생 방안 마련 예정
 - 10월 15일까지 시범운행을 마치고,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 규제·상생방안 마련 등을 결정할 계획
 - 현재 사업체별로 250대의 전동스쿠터를 운용 중이며, 시 전체에서 총 2,500대의 전동스쿠터가 시범운영 중
- 시정부는 시범운영 기간에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사업체를 상대로 시민불편·권리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방면 평가 시행
 - 일반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속도 규제와 이용 안내서 부착을 법에 명시하고, 추후 세부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
 - 당국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을 과감히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하며 규제와 상생 방안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 경고
 - 7월 15일(현지 시간) 기준 전동스쿠터 공유 운영 사업체 10곳 중 7곳이 각종 위반 사례로 총 14차례 범칙금 발부
 - 범칙금은 최대 1,000달러(120만 원)이며, 위반 사례는 지정 지역 밖 운행 허용, 최대 속도 규정 위반, 이용 후 주차확인 사진을 요청하지 않음, 이용자 불만에 24시간 내 응답하지 않음,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실패, 스쿠터 이용 안내서 미부착 등

향후 발전 방향과 시사점

- 실리콘밸리의 공유서비스 개발 물결을 받아들이며 시민 복지 추구
 - 차량 공유서비스가 일반화되자 교통 약자로 분류되던 장애인·노인과 교외 지역 시민의 불편함이 대폭 해소
 - 장애인·노인·교외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운영은 예산 문제로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차량 공유서비스 일반화 이후 대폭 해소
 - 시정부는 교통복지 관련 예산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진입장벽이 낮아 교외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차량 공유서비스에 긍정적 태도
 - 택시 기사 등 이해관계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의 편익을 지향

- 전동스쿠터 시범운영 업체 10곳 중 범칙금을 발부받지 않은 업체는 라임(Lime), 리프트(Lyft), 비오라이드(VeoRide) 등 단 3곳
- 이들은 모두 공유서비스 업체의 공룡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 규제·상생 방안을 마련해 이들과 시민 삶의 질 높이기에 주력할 계획



[그림 1] 시카고시 전동스쿠터 이용 안내 포스터

https://www.chicago.gov/city/en/depts/cdot/supp_info/escooter-share-pilot-project.html

<https://www.chicago.gov/content/dam/city/depts/cdot/Misc/EScooters/E-Scooter%20Map.pdf>

https://www.chicago.gov/content/dam/city/depts/cdot/Misc/EScooters/ChicagoScooterFlyer_forweb.pdf

<https://chicago.curbed.com/2019/6/11/18651216/scooters-chicago-lime-bird-how-to>

<https://www.illinoispolicy.org/chicago-rolls-out-e-scooter-pilot-program>

강기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

낙후된 상점가 부동산 매입·수리로 지역재생

네덜란드 로테르담시 / 산업·경제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는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관이 함께하는 ‘손에 손잡고’ 연합을 설립함. 해당 연합이 만든 사회적 상가 협동조합은 주요 상점거리의 부동산을 적극 매입한 뒤 서비스·상점 구성 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이룰 계획

배경과 개요

- 페이어노드(Feijenoord) 지역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생이 시급
 - 로테르담을 가로지르는 니우어(Nieuwe)강 남쪽에 있는 오래된 항구 지역
 - 19세기 말 도시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된 곳으로 전염병 환자 격리 시설, 고아원, 가죽 공장 등 소위 혐오 시설이 들어섬
 - 1970년대 이후 기존 시설 대부분을 철거하고 공공주택 지역으로 대규모 재건
 - 현재 8,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85%가 이민자 출신
 - 로테르담 내에서 교육·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중 하나였지만, 최근 들어 고학력·고소득의 주민이 유입되어 등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히 일어나는 중
- 지역 중심부의 주요 상점거리도 활성화를 위한 재생이 필요
 - 베이어란셀란(Beijerlandse laan)과 흐룬 힐러데이크(Groene Hilledijk)는 지역 중심부의 주요 상점 거리이지만, 온라인 소매시장 성장 등으로 규모가 크게 위축
 - 또한, 지속적 범죄 발생으로 양질의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이나 생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
- 시정부가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에 손잡고’ 연합 설립
 - 로테르담시청을 위주로 다양한 관련 단체가 주축이 되어 참여
 - 로테르담 남부 국가연합체(NPRZ)¹⁾, 분스타트(Woonstad) 로테르담²⁾, 후마니타스(Humanitas) 로테르담 재단³⁾, 사업투자지구 개발기구(BIZ)⁴⁾, 인홀란드(Inholland) 전문학교 등

1) 로테르담 남부지역의 교육 환경 및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로테르담 시청, 중앙정부, 경찰, 검찰, 지역 사업체, 요양 기관, 교육기관 등이 연합해 출범한 단체

2) 로테르담을 기반으로 주거지역 개발, 부동산 중개 등을 하는 공공주택 조합

3)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

4) 지역 내 화폐 유통성을 높이는 공공사업에 참여하며, 시정부와 협력해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 투자 관련 자문 제공

주요 내용

- ‘손에 손잡고’ 연합 아래 사회적 상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페이어노드 지역을 거주와 소비에 쾌적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계획
 - 앞으로 4년간 1,200만 유로(159억 6천만 원) 우선 투자
- 상점거리는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인상을 주어야 하지만, 기존의 상업지역은 경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자와 주민에게 부정적 인상을 줌
 - 간판과 광고 대부분이 로테르담 경관 조례에 어긋난 상태
 - 무분별한 차양과 셔터 사용도 햇빛을 차단하고 시야를 제한해 이용객에게 답답하고 안전하지 않은 인상을 줌
-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공공공간과 상점 구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치안과 삶의 질을 향상
 - 재생 대상 지역은 1.2km 길이의 거리로 240개 상점이 있으며, 그중 140개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어서 서비스와 상점을 다양하게 구비·개편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
 - 로테르담시청과 협동조합 구성원이 상업지역의 20~30%에 해당하는 다수의 부동산을 확보할 계획
 - 2019년 4월 기준, 소매상으로 쓰였던 건물 24채는 이미 확보하였으며, 내부 수리 등으로 기존 용도와 다른 건물로 탈바꿈할 예정
 - 심하게 낙후되어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두 채는 완전 철거 후 2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재건축
 - 재정은 NPRZ 예산을 포함해 국가 안보 이사회, 도시개발 부처 등 중앙정부도 지원
 - 흐른 힐러데이크 거리는 사업체와 서비스업체를 유치하는 데 주력
 - 상업시설은 일부 코너에 집적시켜 수가 적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
 - 그 밖에 기존 상업 용도의 건물은 주거 시설로 변경하거나 치과·물리치료실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변경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30km 지역 내의 자전거 도로를 개편·확충하고 트램 노선 녹화, 횡단보도 안전 확보 등을 추진해 도보 환경도 개선할 방침

<https://www.persberichtenrotterdam.nl/bericht/2774/Alliantie-Hand-in-Hand-start-op-Beijerlandselaan-en-Groene-Hilledijk/>

<https://www.rotterdam.nl/wonen-leven/wijk-feijenoord/>

<https://www.gemeente.nu/economie/hand-in-hand-voor-aantrekkelijke-winkelstraten/>

<https://www.nprz.nl/>

성장주기별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미국 오스틴시 / 산업·경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오스틴시는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창업 준비 기업의 성장지원부터 기존 오스틴 거점 기업의 새로운 시장 확보와 역량 강화까지 지원 가능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개요와 배경

- 오스틴시는 미국 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음
 - 2016년 CNBC 방송국이 선정한 창업하기 좋은 도시 1위
 - 2016~2017년 아메리칸 시티 비즈니스 저널(American City Business Journals)이 선정한 '소기업 활력 순위'(Small Business Vitality Rankings) 1위
 - 2016년 선가드 어베일러빌리티 서비스(Sungard Availability Services)가 선정한 '기술 스타트업(Tech Startup) 창업하기 좋은 도시' 1위
- 시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오스틴시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 내에 소기업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 담당 부서를 두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주요 내용

-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두 종류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비즈 에이드(BizAid) 프로그램: 오스틴 시내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진행
 - 소규모 사업가가 활용할 수 있는 오스틴 시내의 자원을 소개하고, 사업 계획, 마케팅 플랜, 재무 계획, 사업 관리에 관한 1대1 코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비즈 오픈(BizOpen) 프로그램: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시정부의 도시계획, 허가 절차, 규제 내용, 시설점검 방침 등의 내용을 온라인 세미나로 제공
-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니즈를 파악하여 보고서(City of Austin Small Business Program Needs Assessment Report)를 발행
 - 시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수행해 자료를 수집

- 2017년 조사는 1,018건의 설문조사, 105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15명의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짐
- 최종 보고서와 데이터는 웹사이트에서 공개
-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스틴 소기업·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
- 소수자·여성 소상공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은 ‘Minority-Owned Business Enterprises(MBE)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WBE) Program’
 -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새롭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교육 내용은 마케팅, 소셜미디어 활용, 인사관리, 재무관리, 세금 관련 내용
 - 6개 수업을 수료하면 ‘비즈니스 스킬 인증서’(Business Skills Certification)를 발급
-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몰 비즈니스 엑셀레이터’(Small Business Accelerator) 프로그램
 - 참가 대상은 오스틴에 거점을 둔 소상공인 20여 명
 - 참가 신청을 받아 사업 기간, 연매출, 종업원 수,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발
 - 참가자는 3개월간 35시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수료
 -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코세라’(Coursera)를 이용
 - 온라인 교육 외에도 오프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 세션을 진행
 - 교육 내용은 기업의 역량 강화, 가치 창출, 시장 확장 등 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내용
- SNS 활용 관련 정보 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채널로 지원 프로그램, 이벤트, 참가자 소감 등 정보를 공유

<https://www.cnn.com/2016/08/11/austin-is-top-place-for-startups-in-america-not-silicon-valley.html>
<https://www.bizjournals.com/washington/subscriber-only/2016/04/29/small-business-vitality-rankings.html>
<https://www.bizjournals.com/austin/news/2016/07/06/austin-no-1-u-s-city-to-launch-tech-startup-survey.html>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small-business-program>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EGRSO/SmallBusiness_NeedsAssessment2017.pdf
<http://www.austintexas.gov/page/small-business-accelerator>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small-and-minority-business>
<https://www.austintexas.gov/news/applications-open-city-austin-small-business-accelerator>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도시웰빙 높이는 사회혁신 아이디어 현장검증

캐나다 에드먼턴시 / 사회·복지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노숙자·빈곤층 등이 집중되는 소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도시 전체의 웰빙을 높이기 위한 도시 웰빙 계획(Urban Wellness Plan)을 마련함. 적합한 해결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사회혁신 접근법을 적용한 13개의 실험적 아이디어를 선별 후 소규모 현장검증(Field Test)을 진행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

배경과 개요

- 노숙자·빈곤 문제가 소수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 해결 필요
 - 노숙자·빈곤층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에드먼턴만의 문제는 아니며,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됨
 - 하지만, 해당 지역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시정부는 도시 전체의 건강과 웰빙을 추구할 의무와 필요가 있음
- 시정부는 취약지역을 위주로 도시 웰빙(Urban Wellness)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 2017년 5월 시의회는 시정부가 지역사회·경찰 등과 협력해 도시 웰빙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는 안에 동의
 - 도시 웰빙 계획은 'RECOVER'라는 상징적 단어로 명명되었으며, 빈곤탈출 프로그램, 지역활성화 방안과 같은 다른 정책과 함께 추진
 -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을 한곳에 모아둔 지역 웰빙 센터(Community Wellness Center)도 제안
 - 에드먼턴시에서 가장 주변화된 5개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
 - 하지만, 도시 전체의 웰빙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
- 도시 웰빙을 정의하고 최적의 해결법을 찾기 위한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
 - 가장 소외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 현재 변영 중인 공동체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지역과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쌓아갈 수 있는 웰빙 서비스 계획은 무엇인가?

주요 내용

- 사회혁신¹⁾ 접근법을 도입해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중점
 - 사회혁신의 중심은 협업이지만, 협업에 필요한 신뢰 관계를 키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인지
- 지역사회 자문위원회와 외부 파트너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추진
 - 지역사회 자문위원회는 이웃 주민, 지역사회 단체, 기업 협회, 사회복지 기관을 대표하는 개인으로 구성
 - 외부 파트너위원회는 공공부문, 사회적 기금 운용기관, 지방정부 관계부처,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로 구성
- 계획 실행의 기본 원칙 수립
 -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보, 사회 구성원 중심과 포괄성 지향, 가진 자산과 장점을 활용하는 접근법, 혁신과 창조성 강조 등
 - 획일화된 구상이 아닌, 에드먼턴의 특성에 맞는 장소 기반의 해결책을 찾을 것
 - 전반적인 활동 과정에서 투명성·협업을 강조하며, 다양한 구성원과 교류하며 계획·성과를 지속 공유
 - 지정된 5개 지역을 시작으로, 도시 전역으로 계획을 확장
- 실험적 아이디어 13개를 선정해 소규모 현장검증 시행
 - 해당 위원회에서 도시 웰빙 증진에 도움 될 소규모 실험적 아이디어 13개를 프로토타입으로 선정해 2018년 봄 8주간 소규모 현장검증을 진행
 - 13개의 아이디어는 웰빙 서비스, 일과 학습, 활기찬 이웃, 열린 협업, 공동체 지원의 5개 범주로 분류

[표 1] 도시 웰빙 계획의 13개 실험적 사회혁신 아이디어

도시 웰빙 계획의 13개 실험적 사회혁신 아이디어	
• 신인 예술가 문화클럽	• 빈 상점의 디스플레이 활성화 방안
• 직업기술 매칭	• 도시인의 만남·친목·식사를 위한 공간
• 정부 소유 부동산에서 채소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을 고용	
• 비공식적 공적 지원과 공식 서비스 간의 접점 개선 연구	
•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연계방안	
• 도심 건물 앞 보도 개선	• 공공화장실 디자인 경연
• 사회적기업 연대	• 기본소득 보장
• 웰빙 위원회 주도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끌어내는 방법	

1) 사회적 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실천을 의미함. 그 정의와 범위는 넓지만, 신기술을 포함한 모든 방법론적 혁신을 활용하며 시민사회의 확장·강화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정무역·사회적기업도 사회혁신의 한 유형이며,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 IT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나 원격 교육(학교에 나올 수 없는 학생을 위한)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2018년 5월, 공개 쇼케이스를 열어 시민에게 현장검증 결과를 공개

성과와 향후 계획

○ 방법론적 성과

- 각종 사회적 지표 데이터(사회경제성, 지역 취약성, 인구센서스 결과, 범죄율 등)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결합한 데이터의 지리적 매핑 가능
- 복잡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 ‘변화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 법률·표준·협업·정보공유 등의 효과 확인
- 디자인 그룹과 협력한 민족지적(Ethnographic)²⁾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기초연구 수행
- 도시 건강의 개선 정도를 보여주는 RECOVER 계기판을 개발해 성과를 시각화

○ 계획 진행 과정에서 얻은 교훈

- 깊은 곳으로 가라
 - 성급히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근본적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였으며, 데이터에 서사(이야기)가 추가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을 더 부드럽고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었음
- 사람들의 힘
 - 구성원이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프로세스가 실행과정의 핵심이었음을 확인
-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라
 - 복잡한 도시 문제는 일방적 선형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새로운 각도에서 다양한 경로로 아이디어를 테스트해야 함을 깨달음
 - 다양한 작은 아이디어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테스트하여 큰 단위의 해결책으로 이를 방법을 찾아야 하며, 프로젝트 도중이라도 방향 바꾸기를 피하지 않아야 함

○ 권장 사항과 향후 계획

- 기존 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거버넌스를 개발하고, 행정·관리 측면의 개선사항 반영
- 기존 프로토타입을 지원하고, 새로운 실험적 아이디어의 테스트도 시작할 예정
- 지역사회, 교육기관, 사회혁신 실무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 데이터 세트를 세분화하여 도시 건강의 변화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를 개발
- 자선사업과 기타 정부자금을 끌어들이기 자금조달 방법 탐색

2) 장기간에 걸친 근접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대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질적 연구 방법

<https://www.urbanwellnessedmonton.com/>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장기실업자에 '5년 보장'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독일 베를린시 / 사회·복지

독일 베를린시는 기존의 장기실업자 정책이 오히려 실업 상태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함. 1~3년간 실업 중인 사람에게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서도 기존 직업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5년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배경과 기본 구상

- 기존 장기실업자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 도구를 도입할 필요
 - 하르쯔피어(HartzIV)라고 불리는 기존의 장기실업자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장기 실업 상태의 고착화를 유도해 결국 정부가 실업자를 관리하는 상황이 발생
 - 디지털화·자동화 증가로 또 다른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 도구의 개발 필요성도 증대
- 장기실업자를 공공의 비전문적 업무에 고용하고, 추후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직업 지원 프로그램 '연대적 기본 소득'(SGE: Solidarisches Grundeinkommen)
 - 공공기관·비영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익을 추구하며 기존의 직업을 위협하지 않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마련
 - 단순한 임시 고용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된 고용을 추구하며, 최저시급이나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제공하며, 지원자의 자발성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
 - 시정부는 연대적 기본소득이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과 표현이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설명

주요 내용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 5년 고용을 추진
 - 실업기간을 1~3년으로 정한 이유는 독일의 실업급여 형태에 따른 것
 - 문제가 제기된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업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실업급여 1형(ALG1)이 아닌, 실업급여 2형(ALG2) 혜택을 받는 실업기간 1~3년의 가입자
 - 5년간의 고용계약을 우선하고, 5년 후에는 취업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5년 후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상태를 유지하거나, 민간 취업시장에 재진입

- 주정부는 5년 후 참여자의 재취업, 취업자격 획득, 공공부문 투입 등을 보장
- 보수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계약법에 따라 고용회사와 계약한 대로 받지만, 협약이 없을 때는 최저임금을 적용
- 5개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2025년 마무리
 - 2019년 하반기에 SGE 파트타임 모델을 개발할 예정
 - 3년 후에는 기업과 중간 대차대조표를 내고, 참여자가 국가 보조를 받지 않는 실제 취업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확인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
 - 2025년까지 연평균 4천만 유로(532억 원), 프로젝트의 참여자당 연간 3만 유로(4천만 원, 소득세·사회보험비 포함)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
- 베를린 시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면서 전문적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직군에 투입
 - SGE 프로그램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SGE 프로그램 참여자의 업무 개요

업무 분야	주요 업무 내용
도시 안내인	당국에 공공공간의 청결·결함 등을 신고하고 관리, 대중교통·공공시설 관련 점검과 정보전달, 문화·교육 서비스 안내 등
학교 보조사	청결·정리 등 학교의 일상생활을 돕고, 전문 교육인력의 수업 준비 등을 지원
유치원 도우미	청소·조리·수업준비 등의 유치원 활동을 보조
주택건설조합(지구)	주(州)의 주택건설조합 시설 내외부의 청소와 관리, 재고관리 등
주택건설조합(지구도우미)	주택건설조합의 지역 업무 중 사회적인 영역을 보조
이동 도우미	사회적 접촉 강화를 위한 이동 동반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노숙인 등이 관청·병원 등의 예약 서비스에 늦지 않도록 동반
사회적 안내인	사회적 참여·통합,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이나 가정집을 방문해 책 읽어주기, 말벗 되어주기,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
환경 교육·정보 도우미	환경 관련 정보제공이나 교육 활동을 지원
노숙자 안내인	노숙자가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노숙자를 도와줄 인력이 있는 기관으로 안내

의의

- 기존의 장기실업자를 관리하기만 했던 HartzIV의 새로운 대안
 - 독일 사민당(SPD) 소속의 베를린 시장 마이클 뮐러(Michael Müller)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최대 4,000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얻기를 바램

- 하지만 연방 노동부가 장기 실직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임금보조금 지원을 원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축소
 - 기민당(CDU), 자민당(FDP) 의원들은 이 아이디어가 장기 실업 해소의 잘못된 방법이라고 비판하며, 국가가 실업자에게 돈을 쓰기보다는 실제 실업자가 취업 시장에 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

<https://www.berlin.de/special/jobs-und-ausbildung/nachrichten/berlin/5820237-5510939-solidarisches-grundeinkommen-modellproje.html>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tteilung.786197.php>

<https://www.berlin.de/sen/arbeitsbeschaeftigung/solidarisches-grundeinkommen/>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tteilung.786197.php>

<https://www.heise.de/newsticker/meldung/Weg-von-Hartz-IV-Berlin-testet-solidarisches-Grundeinkommen-4460482.html>

<https://www.tagesspiegel.de/berlin/solidarisches-grundeinkommen-rot-rot-gruen-startet-im-juli-berliner-pilotprojekt/24402562.html>

<https://www.zeit.de/2018/15/solidarisches-grundeinkommen-alternative-hartz-iv-michael-mueller>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공립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찬반논란 지속

인도 델리NCT / 행정·교육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 내 CCTV 보급에 힘써온 인도 델리NCT 정부는 하반기에는 공립학교를 위주로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교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하고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그 영상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임. 델리NCT 정부는 이 조치가 교내 안전망 확대와 교육환경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지만, 인권침해 우려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

정책적 배경

- 델리NCT 정부는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다목적 CCTV 보급 노력을 지속
 - 특히 하반기부터 지역 내 총 728개 공립학교의 교실·운동장·주차장 등 교내 전역에 CCTV 설치를 시작하였고, 올 11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고
 - 설치비용과 5년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40억 루피(7백억 원)의 예산 편성
 - CCTV는 학교별로 200여 대, 총 14만 6천여 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200개의 학교에 동시설치가 진행 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 7월 초 1개의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210대의 CCTV 설치와 시연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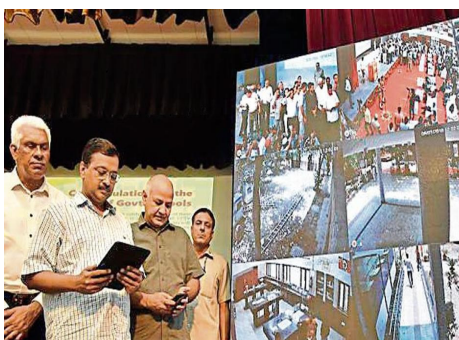
주요 내용

- 교내 안전사고 예방·범죄방지 목적, 교실마다 2대의 CCTV를 설치
 -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일부 사립학교의 교실 CCTV 운영결과 소속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예정대로 정책추진
- CCTV 운영관리권한은 각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에게 주어지며 전체 교육기관의 CCTV는 신설된 중앙관리 센터가 총괄운영을 담당
 - 각 학교 교장, 교육부 담당관, 교육부 장관에게 최대 한 달 이전의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보호자(학부모)는 전용 스마트폰 앱으로 개인인증을 받으면 하루 최대 3회, 각 15분 간 교실 내 CCTV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음
 - CCTV 영상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것에 의미
 - 자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조성

- 학교별로 CCTV 설치 완료 후 자녀의 소속 교실 CCTV 영상 접근권한 부여와 활용 방법을 학부모에게 SMS 문자로 안내할 계획

향후 전망

- CCTV로 교실 내 폭력과 도난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
 - 교실 내 CCTV로 학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
 - 이외에도 일부 문제가 되었던 학생의 무단결석 방지 효과도 기대
- 교실 내 CCTV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은 편이며, 인권침해라는 부정적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논란도 현재진행형
 - 일부 교사·학부모는 교실 내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등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
 - 반면에 교실은 개인의 활동영역이 아닌 교육장소이며, CCTV 설치로 교내 안전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그림 1] 시범학교 CCTV 운영 시연회



[그림 2] 교실 내 CCTV 영상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ready-to-work-with-centre-on-law-and-order-cm/story-a517tRmYLS0028vLlDdLI.html>

<https://www.indiatoday.in/education-today/news/story/delhi-school-becomes-first-to-provide-live-cctv-video-feed-to-parents-cm-arvind-kejrival-1564401-2019-07-08>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cctvs-of-immense-help-to-teachers-in-pvt-schools/article28119970.ece>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how-parents-of-govt-school-kids-now-have-hi-tech-eyes/articleshow/70110111.cms>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교사 서명운동으로 공립학교 노후건물 재건사업

미국 하와이주 / 환경·안전

최근 미국 하와이주 공립학교 내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자, 교사 1,070명이 서명운동을 펼쳐 노후화된 학교 건물의 재건사업이 시작됨. 주정부는 4,425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7억 달러(8,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세웠으며, 관련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해 재건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배경

- 2019년 기준 하와이주 내 공립학교 256개교의 평균 사용연도가 72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이 중 53개 공립학교 건축물은 사용 연수가 100년을 넘어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짐
 - 노후화된 공립학교 건축물의 안전부실과 인체유해성분 배출 등에 따른 학생 건강 문제 발생 우려
- 올 초 일부 공립학교의 환경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현직 교사 1,070명이 서명운동을 펼쳐 공립학교 노후건축물의 재건사업이 시작
 - 빅 아일랜드 동부지역 23개 공립학교의 환경평가 결과 18개 학교의 노후시설 인근 중금속 오염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혀 학생 건강 문제가 부상
 - 1980년대 이전에 지은 건물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와 클로르데인이 검출
 - 교육 건축물의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느낀 현직 교사 1,070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공립학교의 노후건축물 재건사업이 시작
- 주정부 교육부는 노후화된 공립학교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재건할 예정
 - 2018년 관련법이 주의회를 통과한 후 2억 7400만 달러(3,28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사업 완료까지 5억 달러(6천억 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준비할 방침
 - 학교당 평균 5만 달러(6천만 원)의 비용을 예상
 - 하와이주 공립학교 교사들은 올 여름방학 동안 많은 노후 교육 건축물의 재건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

주요 내용

- 주 전역 256개 공립학교 캠퍼스의 노후건축물 4,425개가 대상
 - 주정부청사가 있는 호놀룰루 오아후섬을 포함해 오는 2021년까지 힐로섬, 빅아일랜드섬, 마우이섬 등의 공립학교 노후건축물 재건사업을 이어갈 예정
 - 올 3월까지 도심 공립학교 6곳의 노후 지붕 교체(안전화)사업을 완료
- 행정절차 간소화로 재건사업의 빠른 진행을 도움
 - 업체 선정에 수반되었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해 재건사업의 속도와 효율성 높여
 - 경쟁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고정가격으로 일체의 사업을 진행하는 JOC(Job Order Contract) 방식 도입
 - 실제로 올 초의 지붕 교체사업 소요기간은 총 34일로, 기존에 비해 빠르게 진행



[그림 1] 하와이주의 노후화된 공립학교 건축물 모습



[그림 2] 공립학교 노후 지붕 교체사업을 완료한 'King Intermediate's cafeteria roof' 모습

- 주정부 교육부는 공립학교 노후건축물 재건사업으로 모든 학생에게 질 좋은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크리스티나 키시모토(Christina Kishimoto) 교육감은 “모든 학생·교사·관리자는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실에 걸어들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함
 - 댄 칼슨 학교시설 및 지원서비스 부교육감도 이 사업은 오래된 학교 건축물을 최신식 시설물로 교체하는 대형사업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붕은 물론 난방·환기·에어컨 등의 추가적인 재건사업이 이어질 것을 언급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ConnectWithUs/MediaRoom/PressReleases/Pages/school-roof-repairs.aspx>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ConnectWithUs/MediaRoom/PressReleases/Pages/Mililani-Middle-Groundbreaking.aspx>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ConnectWithUs/Organization/SchoolFacilities/Pages/home.aspx>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DOE%20Forms/Facilities/FutureSchoolsNow.pdf>

<https://www.hsta.org/News/Recent-Stories/doe-launches-modernized-facilities-maintenance-program>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노후건축물 관리에 市정부 적극 개입 근거 마련

일본 사카이市 / 환경·안전

일본 사카이市는 위험한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민 생활의 안전 확보와 거주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후건축물 적정관리에 시가 적극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사카이시 노후건축물 적정관리에 관한 요강’을 제정·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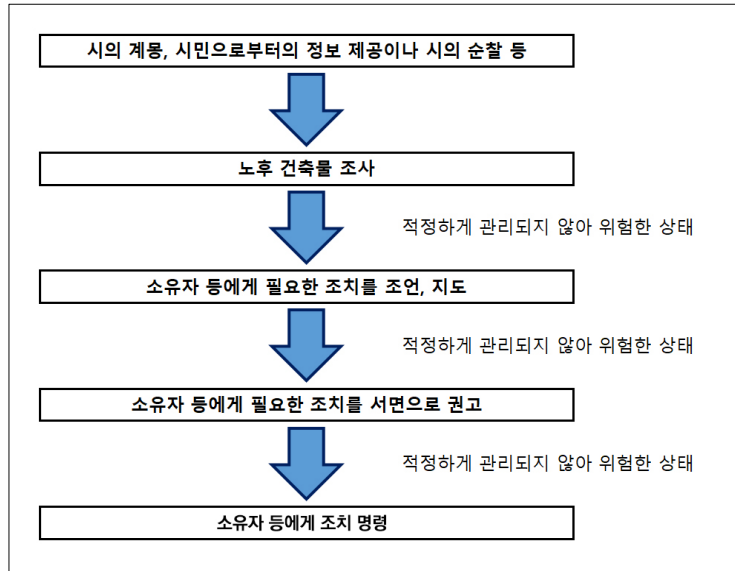
배경

-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나 위험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이하 ‘빈집 등’)이 증가하는 실정
 - 빈집 등은 주변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투기 유발, 범죄·화재·병해충 발생, 교통상의 지장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
 - 일본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 개인 주택 등의 임대·유통 촉진 등의 관점에서 빈집 등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
 - 건축물 관리 규칙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건축기준법을 이용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집 등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
- 하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은 소유자가 적정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규정 등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사카이시 요강 시행

- 시정부가 노후건축물의 적정관리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요강 제정·시행
 - 사카이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건축물의 적정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카이시 노후건축물 적정관리에 관한 요강’(堺市老朽建築物の適正管理に関する要綱)(이하 ‘요강’)을 제정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건축물의 적정관리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
 - 요강은 위험한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에 필요한 조치를 강권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안전 확보와 거주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요강의 핵심은 건축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 시가 위험한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연·지도·권고 등의 방법으로 적극 개입하도록 하는 것

- 빈집 등의 적절한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음
 - 오사카부의 네야가와(寝屋川)시 등은 빈집의 적절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권고, 명령, 대집행, 5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 네야가와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寝屋川市美しいまちづくり条例) 제10조, 제11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그림 1] 사카이시 노후건축물 적정관리 개요

<https://www.city.sakai.lg.jp/kurashi/jutaku/kenchiku/anzen/roukyukentikubutsuyoukou.files/roukyuyoukou.pdf>

http://www2.city.neyagawa.osaka.jp/reiki/reiki_honbun/k217RG00000574.html#e000000622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문화유산 가치’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 환경·안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는 도시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노후건축물을 집중적으로 관리·유지하는 중임. 관련 노후건축물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재정 지원과 법안 개정에 초점을 두어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 마련

배경

- 도시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후건축물 유지·보수
 - 쿠알라룸푸르시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노후건축물 유지·보수에 노력
 - 말레이시아는 플라카-페낭, 페락, 사바, 사라왁의 총 4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곱박강 인근의 술탄 압둘 사마드 건물, 메르데카 광장 등 대표 문화유산 거리를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

주요 내용

- 국가문화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 2005)에 따라 건축물의 문화유산 등록
 - 문화·역사적 가치 전수조사후 문화유산 등록
 - 문화유산으로 등록 시 정부가 관광지 발전을 위한 혜택 제공
 -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건물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건물 유지·보수가 가능
 - 유지·보수 필요시 건축설계자, 역사학자,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
- 재정적 지원
 - 2019 예산안에서 술탄 압둘 사마드 건물과 인근 건물 3채의 유지·보수비용으로 3억 5천 링깃(985억 6,500만 원) 할당
 - 술탄 압둘 사마드 건물은 영국 식민지 시기인 1897년 건축된 무굴 양식의 건축물로 말레이시아 독립을 선언한 메르데카 광장 앞에 있는 역사적 건축물
 - ‘River of Life’ 프로젝트를 진행해 강에 의한 건물 훼손을 막고자 노력
 - 쿠알라룸푸르 마스터플랜(Kuala Lumpur Master Plan 2020)의 하나로 강 재생사업과 더불어 강에 의한 건축물의 노후화와 훼손을 방지

- River of Life는 관개·배수 부서(DID)가 이끄는 7년짜리 강 정화사업으로, 쿠알라룸푸르시청(DBKL)이 주관하는 강 미화사업, 연방자치부(KWP)가 추진하는 상업화·관광업 사업 등 3개 주요 사업이 포함
-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관광 수익으로 문화유산 건축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
 - 쿠알라룸푸르시청에서 고퍽강 인근 지역 대상 도보관광 프로그램 운영
 - 술탄 압둘 사마드 건물 주변에서 길거리 음식 바자회와 문화 공연 개최
 - 쿠알라룸푸르 조명 마스터플랜(Kuala Lumpur Lighting Master Plan)의 하나로 야간축제 개최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위한 법안 개정
 - 작년 1월 1일부터 시내 5층 이상 건축물의 10년 단위 건축물안전보고서 제출 의무화
 -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정부 건축물의 화재안전인증 취득 의무화
- 안전점검 방식 개선
 - 시정부는 건축물관리정보시스템(Building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고, 건축물 관리자에게 스마트카드 제공
 - 스마트카드는 건축위원회와 연동되어 있으며, 시스템에서 3D로 건축구조를 측정 한 후 이를 건축위원회에 전달해 건축물 내부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그림 1] 술탄 압둘 사마드 건물



[그림 2] River of Life 프로젝트

<https://www.iproperty.com.my/news/dbkl-introduced-building-management-and-information-system-using-to-strata-home-owners/>

<https://asklegal.my/p/how-does-malaysia-ensure-that-its-buildings-are-safe-to-live-in>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17/11/23/buildings-must-be-declared-safe-dbkl-periodic-inspection-guideline-necessary-to-ensure-highrisers-str/>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19/03/20/new-tech-for-safer-more-efficient-building-construction-says-ministry/>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18/10/02/funds-dry-up-rm35-mil-lifeline-sought-to- conserve-heritage-buildings/>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시 카메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집중단속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도시교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더 향상된 성능의 인공지능(AI) 전자교통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기존의 신호위반은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함. 이를 바탕으로 단속 인력의 부담을 덜고, 성숙하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배경

- 전자 교통단속 카메라 도입 효과는 있었지만, 단속 대상 행위가 제한적
 - 주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검문소 카메라, 속도 계측기를 활용한 전자교통단속(ETLE: Electronic Traffic Law Enforcement) 카메라를 도입
 - 카메라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위반 건수가 44% 이상 감소
 - 하지만 기존 ETLE 카메라는 신호위반 행위만 잡아내는 한계가 있었음
- 인공지능 ETLE 카메라를 도입해 신호위반 외에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다양한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
 - 2019년 7월 1일부로 향상된 성능의 인공지능 ETLE 카메라를 전격 도입·설치하여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
 -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이나 전면에 짙은 선팅을 한 차량도 포착 가능

주요 내용

-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 주요지점 10개소에 신형 인공지능 ETLE 카메라를 설치
 -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검문소 카메라, 속도 계측기 등 이전보다 성능이 향상된 ETLE 카메라를 신규 설치
 -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는 촬영한 번호판을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하여 위반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
 - 검문소 카메라는 차량 2부제 위반 등 번호판과 관련된 추가 위반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핸드폰 사용 행위 등을 잡아냄
 - 속도 계측기는 검문소 카메라와 연결된 센서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실시간 측정
 - 2019년 9~10월 중 신형 ETLE 카메라를 총 34개소 81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

- 도로교통법 위반 통지서에 열람용 바코드 기재해 위반사항·일시 등 확인 가능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3일 내에 바코드가 포함된 벌금 통지서를 발송하여, 바코드를 스캔하여 손쉽게 위반사항과 일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도입 첫날 총 118명(안전벨트 미착용 39명, 핸드폰 사용 14명 포함), 이튿날 165명의 교통 위반자가 발생하였지만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며, 기존 대비 위반 건수가 40% 감소
- 주정부는 도로교통 단속에 나서는 경찰 인력을 줄이고, 시민의 운전 습관과 교통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민들도 기존의 위험한 운전 문화를 반성하고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7/01/new-etle-system-cameras-can-capture-drivers-using-cell-phones.html>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07/02/12354571/3-fakta-penerapan-etle-dengan-tambahan-fitur-pendeteksi-penggunaan-ponsel>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19/07/07/polisi-kamera-etle-tumbuhkan-sikap-disiplin-warga-dan-jangan-dianggap-hal-menakutkan?page=all>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주민 자발적 참여로 집 앞 동네길 푸르게 가꾸기

프랑스 보르도市 / 도시계획·주택

프랑스 보르도市는 석조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 특성상 다소 건조하고 삭막해질 수 있는 도시 주택가 풍경을 개선하고자 '집 앞 동네길 푸르게 가꾸기' 사업을 시행함.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집 앞에 식재용 구덩이와 토양·식물을 모두 제공하는 한편, 식물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많은 시민의 각광을 받는 중

배경과 목적

- 녹지는 많지만 주거지역 녹화는 공공의 힘만으로 부족해 주민의 자발적 녹화사업 구상
 - 도심 곳곳에 공원과 녹지, 정원 등이 많은 보르도사이지만, 관의 손길이 일일이 닿기 어려운 주거지역의 경관은 다소 삭막한 것이 사실
 - 이를 개선하고자 곳곳에 대형 화분 등을 배치했지만, 투자관리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함
 - 발상을 전환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집 대문 앞을 녹화한다면 어떨까 하는 물음에서 2016년 처음 시작
- 사업의 목적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
 - 시민 모두를 위한 더 아름답고 쾌적한 도보환경의 조성과 제공
 - 각자 대문 앞의 화초를 가꾸면서 집 앞 동네길의 이웃 간 소통 기능 장려
 - 도심 내 자연환경 개선, 나비·벌 등의 곤충 유도로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에 도움



[그림 1] 가장 인기 있는 아가씨 꽃으로 꾸며진 집 앞 동네길

시행 과정

- 해당 사업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대문 앞을 가꾸고 싶은 주민이 직접 신청
 - 자택 대문 앞에 식재를 심고 가꾸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직접 시청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
 - 자의적 신청절차를 두는 까닭은 신청자가 시의 도로·인도 녹화사업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여 구속력을 두기 위함
- 담당부서가 신청서류를 검토해 실제 시행 시 문제가 없을지를 점검
 - 신청자의 주거지 동네길 상황, 해당 주택 앞 지하 수도관 하수관 등 매설 설비 유무, 보행자가 지나가는 여유 공간(최소 140cm) 등 고려
 -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르도시에서 도로·인도의 소유권자인 보르도광역시에 식재에 사용할 부지(지름 15cm)의 임시 사용권을 요청
- 허가가 나면, 시에서 식재용 구덩이를 시공하고 토양을 제공
 - 신청자의 집 대문 앞 인도 위에 직경 15cm, 깊이 20cm 이내의 구덩이를 시공하고, 식재용 토양까지 제공
 - 첫 식물은 시에서 제공할 수 있음
 - 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다년생 식물 위주이며, 클레마티스 몬타나, 시계꽃, 인동속 식물 등
 - 구덩이 설치와 토양·식물 제공은 매년 3월과 10월 2회 시행하며, 상반기에 신청하면 그해 10월, 하반기에 신청하면 이듬해 3월에 제공

녹화 기준

- 무분별한 녹화를 지양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
 - 지나치게 건물 외벽을 가리는 담쟁이 넝쿨류,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부피가 큰 식물, 독성이 있는 식물은 금지
 - 외부 환경에 잘 견디고 물을 적게 먹는 식물을 권장
 - 지정된 자리에 식물을 심은 후, 남은 보행공간의 너비가 170cm 이상일 것
 - 건물 파사드(전면부)에서 인도방향으로 15cm 이상 튀어나오지 않을 것
 - 식물의 전체 두께도 15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규칙은 수직 높이 2m까지 적용
 - 토양의 깊이는 15cm 이내
 - 만일 주민이 희망하여 직접 나무 종류를 인도 위에 심을 때는, 잎·가지·줄기·뿌리를 규정대로 관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
 - 건물 기둥, 스트리트 퍼니처 밑, 가로수 옆에 번식이 빠른 덩굴 식물을 심는 것은 금지

사후관리

- 신청자인 주민이 직접 관리해 시차원 예산 절감
 - 어떤 상황에서도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을 금함
 - 물은 필요할 때만 아껴서 줄 것
 - 식물로 말미암은 도로·인도 오염 발생 시 해당 신청자가 직접 청소
 - 보행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http://www.bordeaux.fr>

http://www.bordeaux.fr/images/ebx/fr/groupePiecesJointes/35413/3/pieceJointeSpec/128611/file/plantes_vegealisation_2016.pdf

<https://urbanisme-bati-biodiversite.fr/observatoire/33-bordeaux-operation-vegetalisation-des-rues>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61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8월 5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